

참사 7주기 세월호 비극 끝나지 않았다

관련 기사 6~7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3면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동아시아계 인종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8~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10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12면

미국 미네아폴리스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찰은 또 흑인 살해

11면

미얀마 투쟁

5면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성지현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해 149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과 차별, 국가의 억압이 심화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세계 억만장자의 소득은 급성장했고, IT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에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증가했다고 밝힌다. “전 세계 지원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젠더 폭력과 가정 폭력이 급증했다. 이는 “봉쇄 조치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가 가해자와 함께 사실상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심각한 수치들도 보고됐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성 폭력과 젠더 폭력이 세계 평균보다 거의 5배나 높은 비율로 급증했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거의 12만 건의 가정 내 물리적 폭력이 보고됐다.”

또,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억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폴란드에서는 낙태에 대한 반



팬데믹 기간에 많은 정부가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했다

동적 공격(헌법재판소가 심각한 기형아 낙태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이 벌어졌고 이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상담 치료를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과 함께 이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팬데믹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던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를 더 악화

시켰다. 난민과 이주민은 “비위생적인 캠프나 구금시설에 갇혔고 국경이 봉쇄돼 갈 일을 잃게 됐다.” 149개국 중 42곳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강제 추방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로 인해 노숙인으로 몰린 사람들은 더욱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

또, “정계와 종교계 인사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낙인을 찍고 이들을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며 비난

했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무슬림, 일부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에서는 성소수자가 표적이 됐다.”

시위와 저항

한편, 불평등과 차별이 커지는 것과 함께 국가의 억압도 커졌다. 많은 국가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이용했다.

“미국,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정부 당국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하는 법을 발표하고 가짜 뉴스 유포, 정부 결정 방해 등을 사유로 사람들을 기소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를 국가안보 위기와 결부시켜 국가안보 법안을 관철하고 국가적 감시 역량을 강화하거나 강화를 시도”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정부가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이 강화되는 동안에도 곳곳에서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 종사자들의 투쟁 사례가 여럿 실려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와 모로코에서 의료노동자들이 불충분한 보호 장비, 부족한 개인 보호 장구, 코로나19를 산재로 지정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시위를 조직했다. 짐바브웨에서는 간호사

17명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가 봉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정부의 집회의 자유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시위와 저항이 계속됐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폴란드의 낙태권 운동, 군부에 맞선 미얀마 민중의 저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에도 사회를 계속 운영한 것은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2020년 탁월한 리더십은 권력, 특권, 사익에서 오지 않았다. 대신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업무를 하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간호사, 의사, 의료종사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 백신을 찾기 위해 수백만 건의 실험과 시험을 진행한 기술자들과 과학자들, 사람들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거리를 순찰하는 사람,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 등.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은 잔인한 불평등을 드러내고 증폭시켰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핵심 구실을 하고 있고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임준형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에게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다. 심지어 A씨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의 조처가 인신보호법상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에의 수용”에 해당하며, 수용을 임시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인천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입국을 막고 공항에 방치해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것이 인신의 자유 제한이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본국에

서의 박해와 어려운 탈출 과정으로 지병을 얻은 데다, 열악한 공항 생활로 인해 탈장 증상으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한다.

입국심사대

A씨는 본국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에 반년간 납치돼 있다가 탈출했다. 무장단체는 A씨의 집을 찾아내 불을 질렀고 동생을 살해했다. A씨의 자녀 다섯 명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닷페이스> 2021년 3월 31일 보도)

A씨는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표로 인천공항에 와서 난민 신청을 시도했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 중에는 난민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곳이 없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난민법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련한 조항(제6조, 출입국법에서 하는 신청)을 근거로 환승객은 입국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난민들은 급하게 탈출하거나 박해를 피하느라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어렵게 난민 인정을 받은 욕비 토나 교수의 사

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위조 여권으로 본국을 탈출해야 했는데, 국가 기밀을 유출한 간첩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일종의 ‘밀수’에 가담해야 했다. 입국심사대에 도달한 다음에야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이런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A씨는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아예 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 신청 작성과 접수를 돕는 의무가 있다”며 “반드시 출입국법 내 ‘입국심사대’라는 특정 장소에 도달한 경우에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중앙일보> 2020년 6월 10일 보도)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해 A씨는 계속 억류돼 있어야 했던 것이다.

항소심은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A씨가 패소하면 계속해서 난민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가 돼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A씨의 난민 신청을 수용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더는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

난민 더욱 옥죄는 문제인 정부

안타깝게도 재판에서의 승소가 A씨에게 순탄한 앞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A씨는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줄지 말지를 따지는 사전 심사(이른바 ‘회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식 난민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19~2020년 연속 0.4퍼센트로 2004년 이래 최저였다.

정부의 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난민 신청자가 받는 생계지원금은 취업이 금지된 초기 6개월 동안만 지급될 뿐이고, 1인당 21만~43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지급액은 2018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이조차 법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2019년 기준 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2.5퍼센트만이 평균 3.2개월 동안 지원받았다.(난민인권센터,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취업 금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애초 낮았던 난민 인정률은 2019년부터 1퍼센트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난민 신청자는 감소하는데 난민 불인정자는 크게 늘었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은 동결됐다. 또한 A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법무부가 그동안 환승객이나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도 난민 신청을 접수해 왔는데 “별안간 A씨의 사안에 이르러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으므로 난민신청서를 쓸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문제인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이 이슈가 된 2018년 이후 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말 난민을 더욱 쉽게 내쫓을 수 있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도 발의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언제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인 정부는 이런 개악들을 철회하고 난민의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취업과 생계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장호중 의사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백신의 신뢰를 떨어뜨린 셈이라 정부는 백신 접종 문제로 계속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30세 미만 청년들은 다른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접종을 미뤘다. 그러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위험도가 더 커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는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80대의 경우 치명률이 20퍼센트에 이른다. 반면 30세 미만은 감염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20대 청년들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이익이 작아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금 앞서 영국 보수당 정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나라 정부들은 훨씬 광범한 층을(60세 미만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아예 접종을 금지시킨 나라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월 7일 유럽 의약품청과 영국 '의약품 및 보건의료 제품 규제청'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독일 정부 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위험성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백신의 유용성 대신 부작용에만 주목함으로써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두 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매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거대 제약회사들과 경쟁국 정부들은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드물게” 일으키는 듯하다고 발표했다. 그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유럽 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뿐 아니라 인간 혈소판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 낸 결과로 혈전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혈소판은 출혈이 생기면 혈액을 응고시켜 추가 출혈을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백신이 만들어 낸 항체가 혈소판에 결합되면 혈액 응고 기능이 혈관 내에서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굳고(혈전),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각종 장기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또, 혈소판이 급속히 소모되므로 혈소판이 부족해진다(혈소판 감소증).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출혈이 시작되면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부작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타당성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이유다.

혈전 부작용 발생 빈도는 실제로 “매우 드물다.” 유럽 의약품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월 4일 현재 유럽경제지역(EEA)과 영국에서 총 34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이 중 222명에게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발견됐다. 100만 명당 6.5명꼴이다. 영국에서는 100만 명당 4명꼴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이들의 10~20퍼센트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드물다”

유럽 의약품청은 이것이 자연발생률(100만 명당 1명 정도)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발생 확률도 여전히 희박해서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같은 기간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100만 명 중 두 명에게서만 비슷한 증상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은 없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를 보

면, 한국에서 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경우 170명에게서 혈전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 중 25명가량은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자는 1000만 명 정도이니 그 수는 더 적을 듯하다.

이런 부작용은 아무리 소수여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무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유행을 막기 어렵고, 치명적 위험에 놓일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60대 이상 노인 10만 명당 중환자 발생을 410건이나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접종자 중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감염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감염이 지금 수준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

환자·사망자 규모가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들이나 미국, 브라질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면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은 더 클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일 1만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 나은 백신이 있다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다.

문제는 거대 제약회사들과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지적재산권을 고수하며 생산과 관련된 결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혈전 부작용 발생 보고가 거의 없는 백신을 충분히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원활한 백신 공급에 실패해 선택지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산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거대 제약회사들과 경쟁국 정부들은 큰 이익을 볼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들의 임상 시험 승인과 출시는 갈수록 미뤄지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은 백신 가격 등 제약회사들과의 협상 내용을 비밀에 부쳐 제약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지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만큼 빈국들은 거대 제약회사들과 불리한 조건에서 가격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윤 논리가 어떻게 팬데믹 탈출을 가로막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생산은 이윤 논리에 가로막혀 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면 인류는 새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60퍼센트에 대한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접종자들에게서 남아공 변이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보고가 제출된 바 있다.

자본주의 정부들의 발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은 자본 축적과 시장 경쟁으로 작동하는 이 체제가 어떻게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그에 결부된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연구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주요 기구들의 발표조차 예전만큼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하물며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해서라면 각국 정부들과 거대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들의 발표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해관계는 종종 연구의 목적과 수단을 뒤엎어 놓고

심지어 분석과 결과 조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동료평가를 거친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는 게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일 것이다. 동료평가도 거치지 않았거나 너무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그 신뢰성이 낮다.

자본가들도 안정적 이윤 획득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경쟁 상대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알 필요는 있다. 상상이나 희망에 의존해 공장을 가동했다가는 경쟁에서 뒤처

지거나 아예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지배자들 다수는 안정적 이윤 획득을 위해 팬데믹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지배자들 중 일부는 황당한 믿음을 전파하려 하지만).

그런데 그 과학적 견해나 일치된 의견이 합리적인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경쟁적 축적의 압력 때문이다. 당장의 경쟁 압력은 과학으로 가까스로 얻은 통찰조차 종종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감염이 확산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방

역을 완화하거나 빈국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즉각적으로, 후자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팬데믹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 하지만, 근시안적 개별 조처들이 결국 전체로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적 분석 기술들은 팬데믹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농·축산업

과 토지 이용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용한 도구였다.

또, 대기과학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인류라는 종이 지구 전체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성과와 기술들은 인류가 역사상 최악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수단과 결정권이 상호 경쟁과 자본 축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구하려면 통제권을 이들의 수중에서 뺏겨야 한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정선영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4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채무 결산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가채무(D1)는 1년 새 124조 7000억 원이 늘어 2020년 말 846조 9000억 원(GDP 대비 44퍼센트)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해 2020년 GDP 대비 48.7퍼센트에서, 2021년 53.2퍼센트, 2023년 60퍼센트, 2026년 69.7퍼센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세계 주요국의 국가 부채 평균(GDP의 97.6퍼센트)의 절반 수준이지만 향후 수년간 그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 내에서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우파 지배자들도 심각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국민의힘은 기업 지원에 강조점을 둔 확장 재정적 예산안을 큰 논란 없이 통과시켰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각국 정부가 지나치게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한 것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많고, IMF 등도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지난해 정부가 노동자 고용 지원에 쓴 돈은 기업 지원액의 20분의 1에 불과했다

쓰라고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두 해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침체를 끝낼 수 없는 게 분명해지자, 지배자들 내에서 부채 증가를 무제한 감당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향후 경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계가 있다.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으면 부채 부담은 줄어든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직후 주요 참전국들의 부채 수준은 GDP의 120퍼센트로 지급과 비슷했다. 그 후 20여 년간 부채의 절대 액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전후 장기 호황 덕분에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0퍼센트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호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에는 (거저 효과로) 일시적으로 반등한다 해

도 장기적으로 성장률은 과거보다 떨어지는 장기 불황에 처할 공간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 연준(중앙은행)은 미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1.8퍼센트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10년 평균(2.3퍼센트)보다 낮다.

책임 전가

이 때문에 향후 부채 부담은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부채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둘러싼 계급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우파들도 복지와 재난 지원 등을 줄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선심 정책”, “퍼주기” 등을 비판하며 말이다. 노동계급에게 부채 부담을 전가하려는 공세의 고삐를 죄려는 것이다.

최근에 우파 언론들과 경제지들은 국가 부채가 GDP보다 많은 1985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국가 채무에다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추산한 것이다. 또, 실제 연금 급여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의 현재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과장·왜곡하는 것은 차제에 공무원연금 등을 공격하려는 포석을 까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원을 우선하고 노동자·서민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정부는 최근에도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해,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늘렸던 한시 지출사업을 줄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정

부는 올해 교육재정을 2퍼센트 삭감했고 공무원 실질임금도 줄였는데, 이런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재정적자의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향후 긴축 공격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기업 금융지원에는 91조 2000억 원을 썼지만 고용·실업 대책에 쓴 돈은 불과 4.7조 원(GDP 대비 0.2퍼센트)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 기업 지원책의 20분의 1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부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다.

진보·좌파 중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자본주의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들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주장들도 유행하고 있다. 우파의 긴축론에 맞서려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한 주장일 테지만, 정부의 지출 확대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실현되기 힘든 환상이다. 1930년대 대불황 때에도 미국의 뉴딜 정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 재정 지출을 줄이려 한 1937년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보다는 심화하는 부채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부채 위기는 장기적으로 이윤율 하락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주와 부자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느라 부채 문제를 더욱 키워 왔기 때문이다.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올라 부가 더욱 늘어난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일자리·임금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부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의 전진을 도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양효영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재 다수의견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형사처벌로 인격권 피해를 사전에 억제하는 현행 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여러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형법에서는, 진실을 말하든 허위를 말하든(온전한 진실이 아닌 부분적 진실만 말하는 것도 허위에 해당한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여겨지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권력자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을 말하라는 국가의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한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행위를 위축시킨다.

허명

언론·표현의 자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적극 옹호해 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키려는 명예는 “허명”(가짜 명예)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될 명예라면 그것을 보호해 줘야 할 가치가 있는가”하고 묻는다.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보

호하는 가치는 도대체 ‘명예’인가 ‘위선’인가?”(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이론과 실제》)

회사의 임금 체불을 공공연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특정 기업 종업원이나 퇴직자, 혹은 취업 면접자나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불만 후기를 올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한편 미투 피해자들의 혐의 제기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허위 폭로의 피해자가 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적시 명

예훼손죄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도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피해 입은 혐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일이 되레 범죄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법원은 “공연히”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전파 가능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말하거나 메신저 1대1 대화에서 나온 얘기도 전파될 가능성(또는 의도)이 있다고 보면 “공연히”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일상 대화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학살에도 저항이 계속되다

김준효

미얀마 군부의 학살에도 대중은 놀라운 결의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4월 9일 양곤 북쪽의 바고시(市)에서 군경은 박격포와 유탄발사기를 쏘아 거리 시위 거점을 침탈하고 수십 명을 죽였다. 4월 13일 현재 71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되는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구금·고문도 심각하다. 13일 현재 3000여 명이 구금돼 있는데, 경찰이 구금자들을 고문·살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온다.

이런 야만적인 탄압은 군부가 사태를 온전히 장악하지 못해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음을 보여 준다.(4월 8일 런던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대사관 주재 무관이 대사관을 점거하고 반(反)쿠데타 성향의 대사를 대사관에서 추방한 것은, 그런 불안이 국외에서도 드러난 해프닝이었다.)

이는 영웅적 대중 저항이 70일 넘게 군부와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고시에서도 주말이 지나자 시위대가 다시 거리에 나왔다. 그간 대규모 항쟁이 이어진 대도시들에서는 시위대가 방패와 새총으로 거점을 사수하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대도시에서 시위가 무너지면 군은 더 작은 도시와 마을을 공격할 겁니다. 시위를 사수해야 합니다.”

대도시보다 무기를 구하기 쉬운 지방 도시들에서는 시위대가 사제 공기총, 마체테(날이 넓고 긴 칼), 사제 수류탄 등으로 무장하고 군경에 맞서고 있다. 사가잉주 시민 무장대 조직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총을 쓰지 않으면 [군대는] 시위대를 훨씬 쉽게 죽일 겁니다. 그러면 시위가 없어질 거예요. 다른 곳들에서도 저희처럼 [무장하고] 군경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계속 싸우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이끄는 보건·전력·은행 부문 파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요한 저항 세력이다. 이에 고무돼 교사와 공무원들도 직장을 이탈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전력 노동자들은 직장 이탈 파업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겼던 가난한 동네에 전력 공급을 조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다. 미얀마 군부의 힘은, 수십 년 동안 권력(무장력 포함)을 부지했고 경제적 권력도 일부 가졌다는 데서 나온다. 미얀마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야말로 이런 기반을 타격해 군부의 권력을 뺏을 유일한 힘이다.

전략적 차이

하지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쿠데타에 반대하지만 대중 투쟁의 전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쿠데타 직후 민족민주동맹은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총선 결과 존중”, “헌법 존중”을 내세우고, 대중이

시위로 저항하면 군부에 헌법 수호자를 자처할 명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얀마 노동자·청년들이 보기에, 군부 쿠데타는 이제까지 누려 온 그나마의 민주적 권리도 대폭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대중 저항이 분출했다.

시위·파업이 성장하자 민족민주동맹은 운동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때조차 민족민주동맹의 방점은 “국제 사회”, 즉 서방 강대국들의 개입에 찍혀 있었다. 그래서 민족민주동맹은 시위대가 ‘평화적’ 시위만 벌여야지 폭력으로 저항하면 “국제 사회” 개입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군부는 대규모 유혈 진압에 나섰다. 3월 중순부터 사망자가 폭증했다. 비폭력을 고수해야 한다는 민족민주동맹의 주장은 대중의 자기 방어 조직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민족민주동맹이 주도하는 연방의 회대표자회의(CRPH)는 뒤늦게 대중의 자기 방어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힘쓴 것은 방어 조직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로비였다. 대중 시위는 그 보조적 수단이었다.

군부와 저항 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군부에 권력을 보장하는 2008년 헌법에 대한 반대도 커졌다. 그러자 민족민주동맹은 애초의 입장을 바꿔 2008년 헌법 폐기를 선언했다.

그에 따라 발표한 현장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소수 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여러 민족의 수많은 대중이 단결해 군부에 맞서고 있는 데서 압력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현상이 제대로 실현되리라는 신뢰가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강하지는 않다. 민족민주동맹이 (미얀마 군부와 공유하는) 버마·불교 민족주의를 동원해 소수 민족을 차

별해 온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 현장은 대중의 정치적·민주적 권리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존 헌법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민주동맹은 대중의 자력 행동으로 군부를 완전 타도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이들이 소수 민족 무장 세력 규합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다.

무장

하지만 쿠데타 반대 운동에 대한 소수 민족 무장 세력들의 태도는 단일하지 않다. 대도시 시위대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시민불복종운동’이 자신들의 통제력을 해친다며 불편해하는 조직도 있다.

여기에는 영국의 식민 점령 이래 민족 간 분열·차별이 부추겨져 왔고, 주변 강대국들이 미얀마에 수십 년간 관여해 온 역사가 반영돼 있다.

미얀마-타이 국경 지역에 포진한 카렌족 무장 세력들은 개중 쿠데타 반대에 적극적이다. 국경 양쪽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다. 카렌족은 그간 타이·미얀마 군대 사이에 끼여 오랫동안 공격받아 왔다.

미얀마-중국 국경 지대에 있는 무장 세력들의 사정은 그보다 복잡하다. 이 세력들은 역사적으로 미얀마 군부와 갈등하는 한편 마후 협상도 해 왔다. 중국은 이 세력들을 배후 지원해 왔는데, 이들을 외교적 장기말로 이용하는 한편 국경 지역 치안 유지에 이들의 간접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미얀마-인도 국경 지역에는 민족민주동맹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돼 미얀마-인도 양국 군대의 합동 작전으로 궤멸 위협에 처했던 조직도 있다. 미얀마 군부가 이들의 테러 단체 지정을 해제해 주자, 이들은 ‘중립’을 선포했다.(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소수

민족 청년들은 반(反)군부 투쟁에 동참하는 경우가 적잖다.)

민족민주동맹이 이런 세력들을 끌어모아 “연방군” 창설에 어찌어찌 성공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미얀마군을 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사적 경험도 이를 거듭 보여줬을 뿐 아니라, 군사력 격차도 압도적이다. 미얀마 내 소수 민족 무장 집단들을 모두 더해도 10만 명 미만인데, 미얀마 정규군은 50만 명을 훌쩍 넘고 무장 수준도 질적으로 다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족민주동맹이 “연방군” 창설 시도에 매진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에 개입을 촉구하려는 속내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 ‘미얀마가 제2의 시리아가 되게 놔둘 것인가’ 하는 호소가 계속되는 배경이다.(하지만 시리아는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대중 저항이 뒤틀려 생지옥이 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기대를 거는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해득실을 우선 고려하지 미얀마인들의 안전과 안녕은 뒷전이다.(이에 관해서는 본지 363호 기사 ‘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를 보시오.)

지난 30년 동안, 아웅산 수치와 민족민주동맹의 정치와 전략은 군부에 맞선 대중 저항이 패배를 거듭하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57호 ‘미얀마와 민주주의 투쟁’) 미얀마 대중이 군부에 맞선 투쟁과 정당방위 수단을 발전시키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맹아를 싹 틔우는 과정에서 민족민주동맹과는 다른 정치 대안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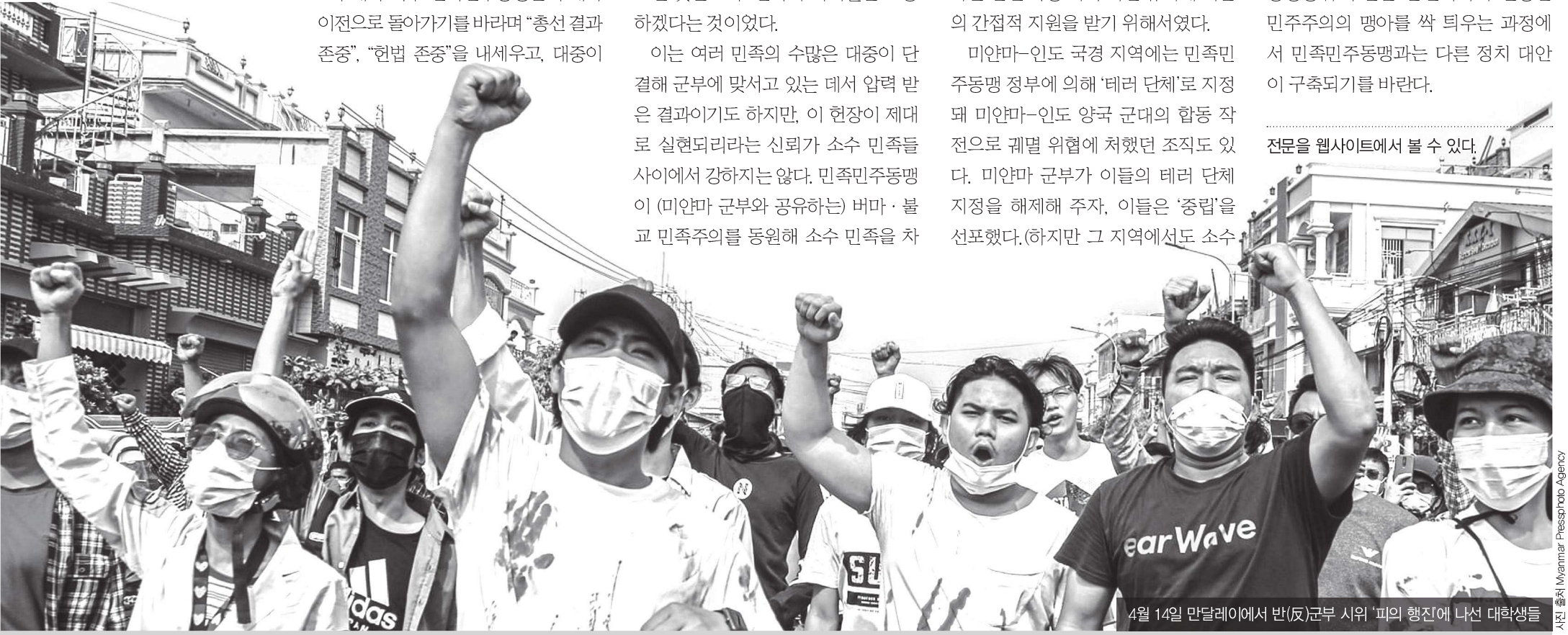


사진 출처 Myanmar Pressphoto Agency

▶ 4면에서 이어짐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동의 불벌죄(처벌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지만, 수사는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가능)이므로, 특정 사실 표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위축되기 쉽다.

2000년대에는 검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나 개인에 대해서 직접 명예훼손죄를 남발하는 경향이 커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공익성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부작용

그러나 법원이 공익성 기준을 넓혀오긴 했지만 여전히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종종 보수적이다. 앞서 소개한 임금 체불을 규탄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 행

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익성을 부정했다. 마침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무죄가 되더라도 지난한 수사와 소송을 겪은 이후이다.

한편,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공개돼 생길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신 교수의 주장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안이 가능할 것이다.

불가피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약점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히 제재해야겠지만, 진실 규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돼야 하는 내용조차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막는 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도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무기’ 역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일 수 있다.”(《한겨레》)

그러나 같은 법조항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보통의 노동계급 사람들의 인격권(명예) 보호는 제대로 못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권력자에 맞서 싸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권력자와 기업을 “공연히” 비판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

세월호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김승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대를 향해 ‘오세훈을 지지하는 걸 보니 역사적 경험치가 없다’고 재단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과 2학년이던 희생 학생들과 또래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 그중 다수가 박근혜 촛불 운동을 지지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청년층이 민주당을 혹독하게 심판한 것은 촛불 운동을 잊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개혁 염원을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이윤, 부패, 친제국주의

7년 전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뒤집어진 우선 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 소속의 배였다. 그 회사는 당시 인천과 제주 사이 항로를 독점하고 있었다. (사건 한 달 뒤 이 항로의 운항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폐업하게 됐다. 하지만 관련 기업이 70개에 이른다.)

세월호는 여객선보다 화물선에 가까웠다. 침몰 당시에 세월호에는 승객 470여 명과 2400톤 이상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엄청난 과적(적재정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음)이었다.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이 2400톤의 절반은 실어서는 안 되었다.

청해진해운에는 세월호와 쌍둥이배라고 불린 오하마나호도 있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 2400톤 중 700톤은, 4월 15일 오하마나호 선장이 더 실으면 가라앉는다고 항의하면서 항구에 두고 간 화물이었다. 결국 세월호는 자리도 없는데 급하게 화물을 더 실었다.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 장치들도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었다.

또, 세월호는 이미 일본에서 18년간 운항된 낡은 배였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중고로 싸게 사와서 마구 불법 개조했다. 화물을 더 실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는 구조적으로 왼쪽이 더 무거워졌다. 세월호는 참사 발생 몇 달 전에도 바람이나 파도로 항해를 중단해야 할 만큼 왼쪽으로 기운 적이 있었다. 선원들은 세월호를 두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배”라고 불렀다.

침몰 전날인 4월 15일은 안개가 잔뜩 끼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세월호를 제외한 다른 배들은 출항을 포기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출항을 강행했다. 이 점도 세월호에 실린 화물과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다. 바로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문제다.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송의 많은 부



304명을 품고 침몰하는 세월호 사람들은 말로 다 못할 슬픔과 충격을 느꼈을 뿐 아니라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후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급하게 사와서 개조한 까닭도 다른 선박회사들보다 먼저 뛰어들어 물동량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선령(선박의 나이)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줬 선박회사들을 지원해 줬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과 이윤에 눈먼 기업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은 뻔했다. 온갖 유착과 부패가 일어났다. 청해진해운은 2013년 한 해 동안 직원 안전 교육에는 겨우 54만 원을 쓴 반면, 선박 중간검사나 정기검사 때는 뇌물로 200~300만 원씩 썼다.

예컨대 인천항만청의 한 간부는 3500만 원과 양주 3병에 세월호 허가를 맞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른 간부들도 돈과 접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가 많았다. 증거 조작 시도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2016년 초 대법원은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저 청해진해운에 속았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터무니없는 판결이었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친제국주의 정책의 하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김대중 정부 때 논의되고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되고 이명박 정부 때 공사가 시작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을 비롯해 평화 운동, 환경 운동 진영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2014년 4월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는 시공업체에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물어 주고 있었다. 이것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출항을

강행한 이유였다.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최초 발단은 조타기, 쉽게 말해 핸들 고장이었다. 정상적인 배는 아무리 급하게 방향을 최대로 꺾어도 10도 이상 기울면 안 된다. 세월호는 비정상적인 배의 구조와 화물의 이동으로 급세 20도 넘게 기울었다. 그때 가장 먼저 쏟아져 내린 것이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이었다. 그 무게는 400톤 이상으로, 승객 5000명에 해당하는 무게였다.

요컨대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선적은 침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선박 허가나 구조 문제뿐 아니라 침몰의 **원인 자체에 국가가 책임 있음**을 보여 준다.

구조 실패와 국가의 총체적 책임 회피

배의 침몰만큼이나 많은 의구심과 충격을 일으킨 것은 바로 국가의 구조 무능 또는 실패였다. “가만있어라”는 선내 방송은 이 문제의 상징이다. 학생들은 선내에 전기가 꺼지고 공기압이 터져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순간 직전까지 “가만있어라”는 방송 지시를 들었다.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의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선내 방송을 듣고 피해자들은 배가 기울어 침몰하는 상황에서 대거 이동하면 침몰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압도적 무게의 화물이 쏠려 배가 침몰 중인 상황에서는 한시 바빠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문제는 구조에 책임 있는 자들, 선박 안전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자들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선원들조차 배가 기울자마자 탈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거듭 들으면서 해경을 기다리기로 했다. 목포해경도 선원에게 가만있으라는 방송 지시로 기다리라고 했다.

그렇게 기다렸지만 정작 출동한

해경 배는 123정이라고 하는 고작 100톤짜리 한 척이었다. 123정에는 의경 몇 명을 포함해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타고 있었다. 소형 헬기도 몇 대 왔지만 서해의 더 큰 배, 더 좋은 설비의 헬기들은 중국 어선 단속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세월호는 100분 만에 완전 침몰했는데, 123정이 도착했을 때는 그 100분 중 45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더구나 세월호는 123정이 도착한 시점 즈음부터 더 빠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123정은 도착해서 정확히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30분 후 처음 한 일은 연락이 닿는 선원들한테 가서 그들을 꺼내준 일이었다. 그리고는 9분 만에 100미터 밖으로 후퇴했다. “90도 이상 기울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고하면서 말이다.

그때 단 한 명이라도 학생들에게 나 오라고 외쳐 줬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만약’을 자꾸만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선원이나 경찰 개인의 이기심, 직업의식 결핍 등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이라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우선순위는 대중의 안전에 있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해양 사고가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며 구조·구난의 많은 부분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민간에 맡겼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도 집권 첫해에만 600개 넘는 규제를 없앴다. 결국 예산 부족 때문에 인명 구조, 수난 구호 명령, 선박 좌초·전복 대처를 담당하던 지방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계가 없어졌다.

참사 때 출동한 123정 대원들은 선박 침몰 시 구명보를 던져 주는 훈련만 해 왔다. 단적으로 말해, 일단 사람이 물에 빠져 동동 떠 있는 상황에만 대비했다. 이런 123정이 침몰하는 배와 수

백 명의 피해자들을 멀뚱멀뚱 보는 사이에 윗선의 명령과 지시는 전혀 구체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았다.

해경 본청과 서해청은 “중앙과 광역까지 나서서 상황 지휘를 하면 통신망에 혼선이 생긴다”며 일선으로 책임을 미뤘다. 목포서는 선장이 판단하게끔 하라거나, 123정장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라고 했다. 청와대는 빨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에만 열을 올렸다. 배는 빠르게 기울고 있는데, 지시받지 않은 행동을 했다가 어떤 덤터기를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책임을 미루기만 한 것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는 국가 기구들의 총체적인 책임 회피 방식과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였던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쓴 책 《외면하고 회피했다 - 세월호 책임 주체들》(2017)은 이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운영 규칙을 지키는 것을 동아줄 삼아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충격과 혼돈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성처럼, 그리고 수많은 대형 참사를 겪는 과정에서 줄곧 유지되어 온 방식이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목포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장지휘관과 상황실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세월호 7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침몰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지 무려 7시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그 긴 시간 동안 박근혜는 머리를 울리고 최순실 등과 비밀 회의를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탄핵 확정 위기에 처해 있던 2017년 1월 1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쁜 사람이예요.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고위급일수록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고위급일수록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이토록 무책임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질문과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참사 이후 정부가 벌인 일을 보면서 더욱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을 모욕하고 발 빠르게 항의 운동을 탄압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참사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한 수작이었다.

박근혜의 운동 감시와 탄압은 참사 당일의 무책임·무관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자본주의 국가의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우선순위 자체가 대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국가 관료 자신을 포함한 지배계급과 그들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4년과 세월호 약속 배신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숱한 악행들은 결국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광화문 중심부의 세월호 광장을 수백만의 촛불 행렬이 휘감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중도하차해야 했다.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구속됐고, 세월호 선체가 드디어 인양돼 물 위로 올라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내세우며 들어섰다. (촛불 운동에서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임했다.)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 4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나갔다.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번지르르한 세월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눈물 짓고 있다. 지난해 말 그들은 찬 겨울에 청와대 앞 농성을 하고, 집단 식발을 하고,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다.

세월호 문제 해결이 멈춰 있다는 사실은, 2014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뤄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법원 판결이 멈춰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호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지독하게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였다.

그런데 2014년 검찰 수사의 지휘 라인 인사의 상당수가 문재인 집권 후에도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들은 앞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 특히 문재인이 당시 민정수석일 때 주요 직책을 맡으며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다. 그는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세월호 적폐 수사 전체를 이끌었다. 이성윤은 추미에 사단의 대표주자로,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외친 기만적이고 위선적

인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 왔다.

한편, 한국선급 해운비리 수사팀장 배성범은 조국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이 있었던 2019년 말까지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 인사 칼바람이 불고 난 뒤인 올해 1월,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유가족이 처벌하라고 요구한 책임자 78명(황교안, 우병우 등 청와대 책임자와 해경 지휘부 등)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해경 지휘부 10명조차 2월 법원에서 전원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로, 세월호 구조 방기 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아직도 123명장 단 한 명뿐이다.

계속되는 참사와 코로나19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재해와 참사는 계속됐다. 노후 불법 개조 선박이었던 스틸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들을 찾아 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은 외면당했다.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 요구는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기도 했다.

영흥도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참사는 화재 사고들에서 발생했다. 체전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각 사고마다 30~50명이 사망했다. 늘 그렇듯 기업은 비용이 싸지만 불 붙기 쉬운 자재나 건물 구조를 선호하고, 정부는 그런 선택을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로 뒷받침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를 비롯해 하루에 6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참사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



올해 1월 집단 식발로 정부와 검찰에 항의한 유가족들 눈물을 머금고 있는 '호성 엄마' 정부자 씨

런데도 2020년 4월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공룡 여당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로 통과시켰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18년간 이어져 온 가슴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까지 피해자를 무수히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까지 무려 1만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7월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였고, 이는 기존 정부 발표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메르스 참사 이후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과제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금 1800명 가까이가 코로나19로 희생됐다. 몇 달 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도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한 또 다른 참사였다.

해결되지 않는 참사, 원인을 알고도 계속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들을 보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끔찍한 악행이자 실패인 동시에 민주당 정부도 공유하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도 평범한 대중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부터 지켜야 한다는 **자본가 지배계급의 우선순위를** 철

저하게 공유한다. (경제 침체는 그런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우파와 문재인 정부 모두와 싸워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미래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세월호 수사 개입 책임자인 황교안과 총선 직전 유가족 비방을 터뜨린 차명진은 물론이고, 악질 막말로 손꼽히는 김진태, 민경욱, 조원진, 심재철 등 강성 우익들이 모두 줄줄이 떨어졌다. 그에 비해 이번 재보선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때 핵심부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들은 그 덕을 본 셈이다.

한편, 이번 재보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서울 박영선, 부산 김영춘)은 전혀 개혁 기대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인물들이었다. 2014년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이 벌어질 때 박영선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그 때 박영선은 집회 무대에 올라와서 유가족 앞에서 운동의 주요 요구(기소권)를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특별법이 누더기가 되는 과정을 주도했다.

김영춘은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지냈는데, 당시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유골 수색을 대충, 빨리 끝내버렸다. 결국 2017년 11월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 사건이 터졌다. 김영춘은 이런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를 비롯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라고 불리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LH 부패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자기 소유의 서울 도심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런 인물들이 민주당의 대표 얼굴로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그 4년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여러 개혁 염원이 배신당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어서는 세월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주 책임자들인 우파 정치인들과 판로뿐 아니라 현재의 집권 세력이자 약속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

참사에 대처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은 양상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선진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자 미국, 영국 등 가장 발전한 선진국에서도 시장 경제 활성화(기업의 이윤 획득 지속)를 앞세운 정부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90만 명을 넘었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 안전이나 공공의료, 방역 체계에

투자할 책임과 능력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와 자본은 공생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황·화재 등 대형 사고·감염병 유행 등 위기의 순간에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사정부터 걱정한다. 또, 국가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질서에 대중이 쉽게 항의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억압한다.

세월호 참사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법은 기업의 이윤 몰이, 국가와의 부패한 유착, 그것을 뒷받

침하는 정부 정책들에 반대하는 투쟁, 즉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투쟁과 세월호 참사 항의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이룩한 최선의 사회체제라고 교육받지만, 반복되는 참사와 감염병 위기는 사실 그런 가르침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반자본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동아시아계 인종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있다

다음은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3월 26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과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 버지니아 로디노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편집한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마르크스21' 회원이자 한국계 미국인이다.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다.

한 명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 무용수였다.

한 사람은 싱글맘이었다.

최소 두 사람은 할머니였다. 최소 네 사람은 미국 시민이었다. 상당수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희생자 둘은 이혼 이후 급전적으로 불안정하게 살았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다수는 취약한 아시아인 이민자 집단에 속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의 중위 가계소득은 백인과 같은 수준이 되거나 더 높아졌지만, 아시아·태평양계(AAPI,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 중 가장 취약한 노동계급, 싱글맘들은 일자리 기회가 적고 사회 안전망도 거의 없는 처지다.

팬데믹

트럼프 정권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급증했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돼 왔고 지난 몇 주간 더 밝히 드러났다.

비영리 단체 '아시아·태평양계 혐오를 멈춰라'는 지난 1년 동안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3800건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그중 503건은 2021년에 벌어졌다. 피해자의 압도 다수는 여성이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경우, 살해된 여성들이 종사한 일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괴롭힘과 폭력, 낙인 찍기를 당하기 쉬운 업종에서 일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같은 인종 내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 업종이다. 그리고 어머니나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도 이런 업종에 고용될 때가 많다.

언어 장벽과 나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기회가 제한된 이런 중년 여성들은 서구인들이 꺼리는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일자리에 흔히 취업한다. 많은 수는 이미 더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불법 마사지 산업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에 견줘 취업 문턱이 낮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서류나 노동허가증,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일자리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어린 아이를 양육하지만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녁이나 퇴근 시간대 이후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버지니아 로디노

이 모든 어려움이 팬데믹으로 악화됐다. 식당이나 네일샵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고 양육을 위한 안전망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경제로 유입됐다. 유색인종 여성은 이번에도 훨씬 큰 고통을 받은 것이다.

성판매

따라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최근의 공격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성판매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간과하면 아시아계에 대한 이 특정한 인종차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게 된다. 바로 아시아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문제다. 그들의 몸은 물건처럼 취급되고, 아시아 여성은 마사지 업소에서 당연히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를 똑같은 것으로 뭉뚱그려 보는 시각은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점이다.

애틀랜타 총격범은 자신이 총을 난사한 스파 업소들을 두고 “없애고 싶은 유혹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적어도, 그 업소들이 [그를 유혹하는 음 성적 영업을]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성판매자에 대한 적개심이 결합돼 아시아

계에 대한 폭력이 벌어진 것이다. 어찌됐든 이 범죄는 궁극적으로 성판매 여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업소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도, 문제는 결국 성판매 문제로 귀착된다. 이 여성들은 사실상 성판매 여성으로 여겨지고 그런 이유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이 인신매매와 성매매 산업의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들이 종사한 산업 자체가 왜곡된 이미지를 이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산업을 규제하고 단속할 때 업소들을 불시 습격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가 많다. 여성들을 더 괴롭히고 상처 입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여성들은 마사지 산업에서 일하면서 (거의 모든 경우 백인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일 때가 많다. 물론 이들은 자기가 당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거나, 신분증이나 휴대폰, 전자 기기, 신용카드, 현금 같은 것들을 압수해 버리는 경험을 직접 하거나 접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범이나, 이 여성들을 등쳐먹는 고용주들은 이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 여성들은 신고했다가는 추방되거나 법적 지위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경찰 예산을 늘려서 마사지 업소 노동자들을 지키게 하거나, 차이나타운을 지키는 특별 경찰팀을 꾸리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에 들어갈 돈을 전부 다 아시아계 사람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여성들이 집세를 내고, 팬데믹 시기에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못 받고 있는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직장에서의 폭력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민 노동자들이 맞닥뜨리는 장벽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거나 규제되지도 않고 음식에서 이뤄지는 일자리로 실제로 내몰린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업종을 존속케 하는 이 체제는 여성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 인종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팬데믹 동안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급증했다

동아시아계 인종차별의 역사

극심한 인종차별이 단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듯,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도 단지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아시아에서 부를 뽑아내려고 혈안이 된 서구 열강은 일본과 중국을 개방시켰다. 이들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해 비단·차·은 등을 수입했다. 중국이 아편을 불법화해 아편 무역을 중단시키려 하자 열강은 두 차례 아편전쟁을 벌였다. 중국은 패했고 유럽과 미국 기업들에 문호를 더 개방하게 됐다. 그러면서 ‘약하고 병든 중국인’이라는 100년도 더 된 고정관념이 생겼다.

전쟁은 거대한 이주 물결을 촉발했다. 수많은 아시아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불결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따라붙었다. 미국에 온 아시아인들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정착촌에 살 것을 강요받았다. 이런 정착촌은 때때로 차이나타운, 저팬타운, 필리피노타운으로 성장했다. 이민자가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공격도 심해졌다.

이런 공격에는 많은 경우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종적 우월감에 의해 부추겨지기도 했다. 백인들은 중국인들이 석탄 광산에서 가장 좋은 광맥을 차지하고, 가장 좋은 사금 채취터를 잠식하고, 백인이 부쳐 먹을 기름진 땅을 부쳐 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인들은 집회를 열어 “중국 역병”을 규탄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질병으로 취급한 것이다. 오랫동안 폭력적인 만행이 이어졌다. 1886년에만 캘리포니아의 차이나타운 십여 곳이 폭도에 의해 잿더미가 됐다.

대륙횡단철도

센트럴퍼시픽 철도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부터 대륙횡단철도 건설을 시작하면서 중국인 이주민 2만 명을 고용했다. 전체 회사 노동력의 90퍼센트에 이르는 수였다. 철도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중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실패하자(일이 너무 힘들어서 금세 일을 그만뒀다)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목숨을 건 위험한 그 일을 떠맡긴 것이다.

골드러시 시기[1840~1860년대]에 대부분 캘리포니아로 건너온 중국인

이민자들은 외부자,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 이들은 일자리를 몹시 찾아 헤매고 몸과 마음 모두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도로 팽배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반(反)중국인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온갖 위험한 일들을 했는데도 중국인 노동자들은 백인 노동자보다 30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았고 숙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혹한 기상 조건과 위험천만한 작업에 비취 보면 건설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독한 괴롭힘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1867년 중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저항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일손을 멈췄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8일 동안 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가장 큰 파업의 하나였다.

노동자들이 이처럼 힘을 선보인 것에 대응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온갖 법이 통과됐다. 교육, 문화적 관습, 기업 활동 등 많은 것을 제약하는 법이었다. 소위 ‘백인 남성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법률도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인과 ‘검둥이, 몰라토[혼혈인], 몽골계’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정점은 1882년 중국인배척법이었다. 중국인 이민자 입국을 일체 금지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정부 사업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금지는 입국 이민자 수 제한을 해제한 1965년 이민국적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계속 이어졌다.

중국인배척법의 가장 직접적인 전례는 1875년 ‘페이지법’이었다. 이 법은 “중국, 일본 등 동양 나라”의 성판매 여성의 입국만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당시 대통령 윌리시스 그랜트는 아시아 여성에 대해 그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편견을 드러냈다. “그들 중 우리 나라로 건너와 명예롭거나 유익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800년대 말 여러 주들이 백인 남성 우월 이데올로기를 지키려 하고 그랜트가 아시아계 여성의 몸을 악마화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집단 폭력은 더 잦아졌다. 진 펄저의 저서



3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시아계 혐오 중단 촉구 집회에 참가한 흑인

사진 출처 Victoria Pickens(출처가)

《축출: 중국계 미국인들과의 잊혀진 전쟁》은 1880년대에 일어난 잊혀진 폭동과 축출, 린치 등을 자세히 다룬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격리되기까지 했다. 1900년 3월 6일, 한 중국계 미국인의 죽음이 선페스트(페스트의 일종) 때문일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당국은 차이나타운을 폐쇄했다. 경찰은 부근에 차단선을 쳤고 남아 있는 백인들을 호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보건 관료들은 가시 철망으로 그곳을 둘러싸기로 결정했다. 정치인들은 중국인들을 가둔 수감여 블록에 이르는 지역을 불태워버리는 것까지 고려하기도 했다. 결국 그러지는 않기로 했지만 대신 차이나타운 둘레에 높은 장벽을 세웠다.

제국주의 전쟁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피해 아시아계 이민자와 난민들이 잇달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도 폭력에 직면했다. 1930년 캘리포니아주 왓슨빌에서는 젊은 필리핀 남성 노동자들이 택시-댄스홀돈을 받고 일정 시간 댄스파티너를 해 주는 여성들을 고용한 무도장에서 백인 여성과 춤을 추는 것에 반발한 백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941년에는 제2차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몰아넣었다.

[각종 아시아인들을 낮잡아 부르는] “국”(gook)이라는 비하적 표현은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재활용됐다. 제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고위 장성들은 아시아에서 여

러 전쟁을 치렀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지로 보낼 미군 병사들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심을 필요성이 생겼다. 미군 병사들은 베트남인들이 사람이 아니라 “국”이라고 교육받았다.

미군은 한국전쟁 동안 미군 병사를 상대하는 한국의 성판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데에 관여했다.]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중단됐지만, 1965년에도 [주한] 미군 병사 85퍼센트가 성판매 여성과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를 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편견은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군 생활과 성매매가 얽히게 되는 것처럼 이런 편견은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 그 기원은 잊혀지고 은폐된 채, 아시아 여성을 극도로 성적 대상화하는 편견은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됐다. 미군 병사들에 의한 아시아 여성 성폭행은 비밀비재했지만 처벌되지 않았다. 1994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국 해병대원 3명이 12세 초등학교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미국 언론들은 그 문제에 그나마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계 여성들이 성적으로 대상화됐다면, 아시아계 남성들은 비하의 대상이 되고 파산한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됐다.

1982년 디트로이트에서 젊은 중국계 미국인 설계사인 빈센트 친이 자신의 총각 파티가 열린던 스트립클럽 바깥에서 두 백인 자동차공장 노동자에게 맞아 죽었다. 두 범인은 친을 야구방망이로 공격하기 전에 비하적인 말로 그를 도발했다.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를 비하했다. 마치 요즘 팬데믹 시기에 온

갖 종류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중국인으로 여기고는 공격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범인들은 [일본인인] ‘너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친을 질타했다. 판사는 친을 죽인 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감옥에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는 애틀랜타 총격범을 동정한 조지아주 보안관 제이 베이커를 떠올리게 한다. 베이커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굉장히 지친 상태고 일종의 막다른 지경에 있다. 어제는 그에게 정말 나쁜 하루였고 결국 그런 일을 저지렀다.” 오래 전 그랜트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드러낸 왜곡된 편견을 제이 베이커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살해 행위는 결코 멈췄던 적이 없다. 198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는 캄보디아계와 베트남계 아이들이 가득한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총격범은 5명을 죽이고 32명을 다치게 했다. 2012년에는 위스콘신주 오크크리크 사원에서 시크계 미국인 6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시아인들이 트럼프 등의 “중국 바이러스” 운운에 반발한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과민반응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계를 향한 광봉의 1년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백화점에서 아이를 칼로 찌르고, 노인에게 불을 붙이고,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노인을 밀쳐 넘어뜨려서 사망하게 하기도 했다. 여성이 공격받는 비율은 남성의 곱절이었다. 여성들은 쫓겨 다니고, 두들겨 맞고, 침을 맞았다.

다인종·다민족 연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마르크스21’ 회원들은 이민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연대체에서 활동하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한 연대를 건설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맞선 공동 투쟁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계 차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이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여러 세기 동안 흑인 해방 투쟁이 이어진 덕분이다. 그러나 흑인-아시아인 연대의 역사는 자주 역사책에서 지워지기도 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중국 이민자의 딸이자 2015년에 100세의 나이로 별세한 그레이스 리 보그스는 입차인 권리와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했고, ‘블랙 파워’ 운동의 비흑인 여성 지도자의 하나였다.

유리 코치야마의 사례도 있다. 코치야마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진주만 공습 이후 그의 아버지는 수술이 막 끝난 상황임에도 체포돼 병원에 구급됐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망했다.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몰아넣은] 1934년 대통령 루스벨트의 행정명령 9066호에 의해 코치야마의 가족은 2년 동안 아칸소주 제롬에 있는 수용소에서 살게 됐다.

코치야마의 정치 활동은 1960년대 초 할렘에서 시작됐다. 그곳에서 코치야마는 아시아계, 흑인, 제3세계 출신 미국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요구하는 운동과 소수인종 연구,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참가했다. 코치야마는 “인종차별은 모든 소수 인종 사람들을 비슷하게 차별받고, 빈곤해지고, 주변화되는 처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흑인 해방 투쟁과 연관을 맺을 더 정치적인 아시아계 미국인 운동을 건설하려 했다. 1963년에 코치야마는 맬컴 엑스를 만났고, 맬컴 엑스가 설립한 아프리카계미국인단결기구(OAAU)에 가입해서 인종차별에 맞서 정의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67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징집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크고 강력한 미국을 위해 내 형제,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 곤경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다.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나? 저 사람들은 나를 검둥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에게 린치를 가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개를 풀지도 않았다. 나의 국적을 빼앗지도 않았고, 내 부모를 강간하거나 살해하지도 않았다 … 어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쏘란 말인가?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둬라.”

피부색이 다른 인종 집단들을 이간하고 대중 운동 내에 존재하는 다인종 연대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에 득이 된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부지런하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모범적 소수’ 신화와, 그들이 그런 자질 덕분에 다른 인종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다는 착각이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다른 인종, 특히 흑인들 사이를 벌려 놓는 데에서 상당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경이로우리만큼 강력했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눈부신 다인종·다민족적 연대를 낳았다. 그 덕분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 젊은이들,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그 밖의 운동들은 2021년 3월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태평양계 혐오에 맞서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함께 집회와 시위, 추모 행사, 온라인 행사를 열고 있다.

‘마르크스21’ 회원들은 이런 연대 활동을 하면서, 연대체 ‘증오에 맞서 단결하자’에서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여성·아시아인·이민자·노동자들을 겨냥한 폭력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로서 분열과 불화를 조장하는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종·민족·젠더·체류자격을 넘나드는 계급 의식을 건설해야 한다.

동지들, 우리는 할 수 있다!

번역 이원웅

지면 제약으로 내용을 일부 축약했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wspaper.org/article/25458>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범죄·선고 및 재판에 관한 법안”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이다. 그러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 우고 팔레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에 관해 썼다.

에마뉼엘 마크롱 하의 프랑스는 실로 좋은 사례다. 시위대가 무차별적 경찰 폭력을 당했고, 억압적인 법이 통과됐으며, 장관들은 “이슬람-좌파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좌파와 무슬림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하의 영국은 또 다른 사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갈수록 파괴적인 관계가 촉발한 최초의 세계적 위기다. 기후 변화는 그런 위기를 더 많이 낳을 것이다.

그 필연적 결과로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을 계획하려는 더 큰 시도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계획은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민주적 형태를 펼 수도 있고, 자본주의를 떠받치기 위해 사회 상층부가 추진하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펼 수도 있다.

팬데믹 동안에는 후자의 계획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가들, 특히 체제 중심부에 있는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멈추고, 이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백신 접종을 조직하려 나섰다.

이 국가들은 막대한 지출과 차입을 해서 ‘봉쇄’ 조치로 경제가 붕괴되지 않게 하려 했다. 이런 조치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물론, 미래는 백신과 새 변종 바이러스 사이의 경주에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계획은 여전히 자본주의적이다. 기존 체제를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수립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심각해진 불평등을 유지·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를 보여 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 가난한 유색 인종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이다. 미국 대도시들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면, 부유한 동네는 접종률이 더 높고 가난한 흑인·라틴계 동네는 사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팬데믹 동안 대중 저항의 물결이 몰



인물지 2021년 3월 15일

3월 15일, 한 남성 경찰에 납치·살해된 사라 에버라드의 죽음을 추모하고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아쳤다. 세계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지난 여름 세계적으로 벌어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였다. 국가에게 이런 저항은 탄압을 강화할 동기를 부여한다. 영국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시위대를 거리에서 쫓아내려 했다.

영국 국가 내에서는 시위 대처 방안을 두고 얼마 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2020년 2월 런던 경찰청장 크레스다릭은 멸종 반란 운동이 “경찰을 무릎 꿇리”려 한다며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분수령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영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가 노예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끌어내려 브리스톨 항만에 내다 버린 것이 논쟁의 분수령이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내무장관은 경찰을 감찰하는 공식 기구인 왕립 경찰감찰단에 지시를 내려 경찰이 시위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었다.

“시위대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하는 최근 영국 경찰의 태도를 지지

한 쪽은 ... 경찰이 동상을 지키겠다고 1만 군중 속으로 달려들었다면 훨씬 큰 문제를 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11일 감찰단 보고서는 에이번과 서머셋 경찰이 동상 철거에 신중하게 대처한 것을 대체로 칭찬했지만, 동시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위 대응 경찰력에 대한 조언으로 주안점을 옮겼다.

“본 위원회는 경찰이 ‘시위대에 유리한 것을 지나치게 쉽게 내준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의 경찰법 개악안은 단지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의 권위주의적 기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국가 기구 내의 더 심층적 변화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런던 교외의 클래팸에서 열린 사라 에버라드 추모 집회를 런던 경찰이 난폭하게 대한 것을 감찰단이 옹호한 데서도 드러난다.

영국 국가는 억압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모욕적인 보고서 역시 그런 경향의 표현이다. 반감게도 ‘경찰과 범죄에 관한 법’은 시위 물결을 촉발해 사람들이 순순히 침묵할 태세가 아님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일말의 환상도 품어서는 안 된다.

존슨 정부는 여러 쟁점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이는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로 접어드는 흐름의 일부이다.

우리는 기나긴 싸움을 앞두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0호 / 번역 김준효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이메일 _____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맹교 ☐ 기타 _____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미국 미니아폴리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경찰은 또 흑인 살해

소피 스카이어

4월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시와 인접한 브루클린센터시 거리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11개월 전 조지 플로이드는 미니아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새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올해 4월 11일,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가 자기 차를 몰다가 경찰에 사살됐다.

미니아폴리스 경찰 당국은 라이트를 살해한 경찰관이 실수로 테이저건이 아니라 총을 꺼내 쏘았다고 했다.

12일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바디캠에 찍힌 끔찍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라이트는 경찰에게 붙잡혀 차 밖으로 끌려 나왔다. 라이트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은 라이트에게 총을 쏘았다.

“젠장, 저 사람을 쏘 버렸네.” 경찰은 떠나는 라이트의 차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분노한 사람들이 라이트가 죽은 현장에 모여들어, 폴리스라인 테이프를 뜯어내고 경찰관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응답했다.

돈테 라이트의 어머니 케이티 라이트는 분노한 시위대에 연설하며, 경찰이 백미러에 방향제가 달랑거린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다

는 이유로 돈테의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수화기 너머로 다루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돈테, 도망가지 마’ 하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때 통화가 끊어졌다. 전화를 다시 걸자 돈테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아 돈테가 운전석에서 죽었다고 했다.

경찰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거듭되는 해산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하고 거듭 외쳤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렉 쇼빈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미국 전역에서 긴장이 높다.

플로이드가 살해된 장소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라이트가 살해됐다. 라이트의 죽음은 미국의 인종차별적 경찰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활동 중임을 보여 준다.

신임 민주당 대통령으로는 미국 사회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부족할 것이다. 대선 선거운동 때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주요 요구인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했고, 지금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아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0호 번역 김준효

조지 플로이드 재판

인종차별적 경찰 시스템이 플로이드를 죽였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범 데렉 쇼빈의 재판이 시작된 첫 주 동안 재판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여러 목격자들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었다) 경악하고 분노하며 자신이 목격한 바를 증언했다.

검사는 플로이드가 경찰에 애걸하는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경찰관은 플로이드를 바닥에 계속 짓눌렀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미니아폴리스 경찰청장은 쇼빈이 플로이드를 바닥에 짓누른 방식이 “규정 위반”이라고 증언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만하다.

쇼빈은 경찰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쇼빈은 유죄가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그런다고 경찰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쇼빈이 플로이드를 짓누른 자 세는 경찰 훈련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다. 2015년 이후 경찰은 이 자세를 237번이나 써먹었다.

이런 문제가 몇몇 “나쁜 경찰”의 문제일 뿐이라면, 미국 경찰이 올해만 벌써 300명 이상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경찰은 노동계급 사람들을 극도로 경멸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여기에 성차별·인종차별이 따라 붙는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없었다면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도 없었을 것이다.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룰 희망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 한 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은 해체되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9호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실체를 규탄했다.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은 전국 611개 지점에서 근무하며 은행 안전과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은행의 온갖 일에 투입되고 있다.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현행 경비법에 위반된다.(지시한 사람과 수행한 경비원 모두가 처벌 대상.)

“지점에 근무하는 수많은 영업점 경비원들은 동전 교환, 주차 관리, 고객 응대 서비스, 각종 비품 구입, ATM 마감 업무, 수표 마감 업무, 대필, 전표

작성, 각종 기계 사용법 안내, 스마트뱅킹 등 수많은 은행 관련 업무를 지금이 시각에도 하고 있습니다.”(기업은행지부 조합원 발언 중)

사실상 은행원 업무의 일부가 경비원에게 떠맡겨져 있는 것이다.

배재환 기업은행지부 지부장은 이렇게 규탄했다. “우리는 화재나 도난 혼잡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사람들이지 의전, 주차 관리, 임원들 동선 보고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비 외 온갖 잡무를 지시하는 것은 모욕적일 뿐 아니라, 경비원의 노동강도를 높여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외주업체 시절, 경비원들은 1년마다 재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처우에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다. 경비원들은 보통 지점당 한 명이기 때문에 더욱 원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불법업무 지시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거부할 시] 파들림 문제, 자르겠다는 협박 등.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해당 지점 가서 투쟁하기도 했어요. ‘거절하면 잘린다’ 이런 게 공식

처럼 돼 있죠.”(기업은행지부 조합원)

2019년 기업은행 사측은 불법업무를 근절해 주겠다고면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전환 후 1년간 사측이 한 일은 고작 지점에 경비원 업무 지침 공문을 보낸 정도다.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이다.

반면, 사측이 지점에 부차하라고 한 경비원 수행 금지 업무 스티커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은행은 불법업무 지시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근절이 된다고 공문은 내려오는 데 공문이 실행되지 않아요”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불법업무 지시가 원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불법파견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원청은 행원과 경비원이 같은 사무실을 쓰며 업무를 대놓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업무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에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전에는 현재 경비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은행 안내원들이 했다. 그런데 이들이 대규모 해고를 당하면서 업무가 경비 노동자들에게 넘어갔다. 원래 정규직이었던 경비원은 아예 외주화됐고 더욱 열악한 처지가 됐다.

이런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 기업은행 사측은 불법업무 근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다. 불법인 게 너무 명백해 말로는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말이다.

경비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하면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수준에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기한다. 하지만 기업은행 사측은 한사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직접고용에 따른 조건 개선 부담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2019년 기업은행은 자회사 전환을 두고 ‘은행권 최초 비정규직 제로’라며 자랑했지만, 그 자회사의 노동조건은 결국 용역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

으로 불법업무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배신감이 보수화를 뜻하는가
-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 ★ [영화평] 〈유대 그리고 블랙 메시아〉: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 ★ 알맹이 빠진 스톡킹 범죄 대책: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양효영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법 시행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핵심적으로 중대재해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경영계는 이 규정을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사망했을 때로 바꾸고, 직업성 질병자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1년 이내에 5명 이상 발생했을 때로 하자고 한다.

이렇게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중대재해 기준을 바꾸면 안전에 더욱 취약한 1인 근무 중에 사망한 고 김용균 씨나 구의역 김군 사고는 중대재해가 아니게 된다.

이에 더해 4월 13일 사용자 단체 6곳이 시행령 제정 건의안을 내놨는데, 직업성 질병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



이미 구멍 뚫린 법에 아예 대문을 내자는 재계 1월 4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자회견에 참가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고 있는데, 사용자 단체들은 뇌심혈관 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해 적용 범위를 더욱 후퇴시키자고 한다.

경영계는 가슴기 살균제나 세월호 참사 같은 재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시민재해 규정도 후퇴시키려 한다. 현재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제조·설치·관리 결함 등으로 인해 벌어진 재해를 가리키는데, 경영계는 특정 원료에 의한 재해로만 이를 축소시키려 한다. 가슴기 재판에서도 쓰인 원료가 피해의 원인인지 불분명하다고 무죄를 받아내더니, 세월호 참사 7주기 코앞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용자 안전 의무

를 축소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경영책임자를 단 1명으로만 축소하고, 원청의 안전 의무를 대폭 후퇴시키는 등의 내용이다.

이미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주가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어 처벌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규정에 허점을 만들어 놔다. 그런데 경영책임자를 단 1명으로 명시해 사용자가 더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전보건 담당자 수준에서 처벌해 실제 기업 경영에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지난 관행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도급이나 용역에 대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투여 등 원청에게

부과되는 안전 의무를 사실상 아예 없애려 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의 처벌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도 더 약하게 만들고 아예 징역 하한선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고의가 없었던 "선량한" 경영인의 경우나 "정부인증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아예 면책하는 규정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경영인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노동자 과실을 물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참사에 대해 끈질기게 개인 과실로 덮어 씌우려던 서부발전소의 행태를 생각나게 한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윤을 우선시하며 작업장 안전과 보건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연간 2000명이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벌써 147명이 작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안전 부실이 지속되는 데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 부실도 한 몫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법 제정에서 대폭 후퇴해 놓고 또 다시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우호적 반응을 내놔다. 4월 11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명확히 만들겠다"고 연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선에서 우파에게 참패한 이후 기업주들의 지지를 묶어 두려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재계를 순회하며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 등 관료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사장들이 참석한다.

안 그래도 기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다수 재해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바람대로 더 후퇴한다면 기업주들은 더욱 폭넓게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고용 보호 못하는 '고용유지지원금' ... 활용률 3.8퍼센트

박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업 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실업 지원에 쓴 지원금은 총 4.7조 원으로, 기업 지원에 쓴 91.2조 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는 점은 사각지대가 넓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제도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키는 기

업들에게 정부가 6개월간 휴업수당의 67~9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지난해에는 지원 기간이 몇 개월씩 부분 연장됐다), 고용 유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정부 지원 수단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 제도 활용률은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3.8퍼센트에 불과했다. 각 나라마다 경기 침체 수준이 다르기는 했지만, 한국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 활용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프랑스 33퍼센트, 이탈리아 45퍼센트, 독일 30퍼센트, 스페인 18퍼센트 등). 물론, 해외에서도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0만 명을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원금 신청 권한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익 계산에 따라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받다가도 중단해 버리는 등의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 같은 문제점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항공·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도 고용보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령,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호텔업 종사자 4명 중 1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탓이다.

중복 답변이 가능한 설문조사에서, 호텔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은 정규직이 99.1퍼센트였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5.5퍼센트에 그쳤다. 일용직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외주·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사업주가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파견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위기에서 완전히 빗겨 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몇 달간 유급휴직을 실시하다가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이마저도 중단해 버리곤 했다. 10퍼센트도 안 되는 휴직급여 부담을 피하려고 '희

망퇴직' 형식을 빌어 일부 정규직을 해고한 것이다.

게다가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는 지난해 230억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도, 올해 1월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100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해고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업주들이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무급휴직이나 해고로 나아가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이는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어떤 노동자들에게 계속된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고통전가에 반대해야 한다.